

20년 만에 소비자권익보호법 첫 수정안(초안)발표

이한나 연구원(KIEP 중국팀)

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4월 28일 20년 만에 처음으로 《소비자권익보호법수정안(초안)¹⁾》을 공표함.

- 이번 수정안(초안)은 새로운 사회경제 및 소비패턴·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○ 중국 현행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 10월 제정하였고 1994년 1월부터 시행되어온 바, 새로운 환경과 문제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옴.

-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2009년 수정작업에 착수하였고 2010년 국무원에 수정안을 올려 3년간의 내부심의 후,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공표하여 공개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음.

- 수정안의 내용은 △ 소비자권익 규정 세분화 △ 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 강화 △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소비방식 규범화 △ 소비자협회 역할증대 △ 행정부처의 감독관리직책 명확화 등 5개 영역이 주를 이룸.

■ 수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,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고, 소비자 '후회권(後悔權)²⁾' 문제 등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추가 및 수정되어 '소비자 권익 강화'에 초점을 맞춤.

- 개인정보 유출·매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·사용·보안에 관한 조항이 추가됨.

○ 기존 소비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나, 사생활권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음.

- 사기행위 시,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확대되었고, 추가배상금은 최하 500위안으로 규정됨.

1) 消費者權益保護法修正案(草案)

2)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에 불만족시 7일안에 반품이 가능함.

-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비방식(인터넷·전화·TV·우편)에 대해 규정하고,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7일 이내 반품을 보장함.

표 1. 소비자권익보호법 수정안의 주요 내용

	현행법(수정전)	수정안
개인정보 보호	* 관련 규정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및 사용하고 서비스를 받을 때, 성명권, 초상권, 사생활권 등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. · 경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사용시 수집 및 사용목적·방식과 범위를 명시하고,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함. · 경영자 및 기타관계자는 수집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반드시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해야함. ·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나 요구 없이 또는 소비자가 명확히 거절한 경우, 상업적 전자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안됨.
사기행위 징벌배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기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,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배상을 해야 하며, 그 금액은 소비자가 든 비용의 배로 함 (원금+1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영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기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,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배상을 해야 하며, 그 금액은 소비자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를 받은 비용의 두 배로 함.(원금+2배) 추가배상금은 최하 500元
새로운 소비방식 규범화	* 관련 규정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터넷·전화·TV·우편 등의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(증권, 보험, 은행 종사자 포함) 소비자에게 경영지, 연락방식,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와 품질, 가격(비용), 이행 기간 및 방식, 위험경고, 판매서비스, 민사책임 등을 고지해야함. ·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을 할 수 있으나, 상품의 품질과 관련된 건은 제외함.

자료: 《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수정안(초안)》 정리

■ 향후 수정안이 통과되면 중국 소비자보호제도의 재정비,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강화, 소비자 분쟁 예방 및 축소 등의 효과가 기대됨.

- 소비자의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, 합리적인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임.
- 국내외 기업은 소비자보호법 강화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, 자발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함.

- 그러나, 피해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-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로 조정하였지만, 소비자가 낭비하는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 배상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.
- 중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으며, '손해배상 상한선을 두지 않는 조항'을 제기하기도 함.

<자료: 中國新聞網, 中國經營網, 人民網,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>